

성인지예산센터

2008년도 연구성과발표회 및 2009년도 착수보고회

- 일 시 : 2009년 3월 27일(금) 14:00~18:00
- 장 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3층 회의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가재정법』에 의해 2010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올해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원년이 됩니다. 동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본원 「성인지 예산센터」가 수행한 2008년도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2009년도 연구 착수보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rogram

사회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주류화연구실장)

제 1 부 “여성자원활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세제지원 방안 연구”의 착수보고회

14:00~14:30 발 표

여성자원활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세제지원 방안 연구

조 선 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30~15:30 토 론

한 동 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 진 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

박 정 애 (여성부 복지지원과)

15:50~16:00 휴 식

제 2 부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의 2008년도 연구성과발표회 및 2009년도 착수보고회

16:00~16:20 발 표

2008년도 연구 성과

김 영 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20~17:00 발 표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Ⅲ):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추진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 영 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마 경 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7:00~18:00 토 론

김 경 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원 종 학 (한국조세연구원 박사)

이 재 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 희 리 (기획재정부 문화방송재정과 사무관)

장 석 준 (여성부 성별영향평가과 사무관)

김 인 숙 (여성민우회 대표)

강 현 희 (청와대 여성정책비서관실 국장)

18:00 폐 회

“여성자원활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세제지원 방안 연구”의 착수보고회

- 여성자원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세제지원 방안 연구 3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의 2008년도 연구성과발표회 및 2009년 착수보고회

◆ 2008년도 연구 성과

-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Ⅱ) : 성인지 예산서(안)의 시범작성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19
- 근로장려세제(EITC)와 여성의 노동공급 : 실증분석과 정책과제 29

◆ 2009년도 착수보고

-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Ⅲ)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추진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38
-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42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51
- 해외의 성인지 예산: 시민사회 주도 3개국 심층연구 58
-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62

◆ 제 1 부 ◆

“여성자원활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세제지원 방안 연구”의 착수보고회

여성자원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세제지원 방안 연구

■ 연구진 및 연구기간

○ 연구진

- 원내: 조선주(연구위원), 이선행(연구원)
- 원외: 한동우(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외부전문가 자문: 여성부, 행정안전부, 한국비영리학회 교수진 등

○ 연구기간: 2009. 1. 1 ~ 2009. 12. 31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개인의 시간을 공익을 위해 기부하는 자원활동은 국민소득계정, 노동력 통계 등에서 제외되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인권 등의 중요한 분야에서 서비스 생산의 중요한 투입요소로서 역할을 해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게 인정됨(박태규, 2004). 즉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민간 자원 부문(the voluntary sector or the third sector)의 역할로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한편, 고학력 우수 여성의 증가와 자원봉사 영역에서의 여성이 활동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음. 실제 2002년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7.2%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18시간을 차지하여 그 숫자가 작지 않음(이강현 외 2003).
- 그러나 이와 같이 자원활동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원활동의 수요처가 매우 한정적이고, 실제 자원활동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들은 일부 여성의 무급노동 중 가사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여성의 자원봉사참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원봉사 관련 세제, 경제 등과 관계된 실증연구 및 관련 정책연구는 이러한 실정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경제·사회 선진화를 위한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자원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며, 여성자원활동 지원 및 관련정책 및 조세지원 효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 여성인력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여성자원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득세 등 세제 개선 정책에 근간을 제공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부처(행정안전부, 여성부 등) 공무원
- 여성자원활동 관련 단체 심층면접 또는 간담회
- 정책 시뮬레이션

나.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여성자원활동관련 지원 및 관련정책
- 우리나라 자원활동의 현황과 여성이슈
- 개인의 효용함수를 통해 자원활동 함수 추정 및 여성자원활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 여성자원활동의 세제지원 및 정책발전 방안 등

※ 주요분석(사용)자료:

- ① (사)볼런티어21의 2005, 2008년 한국인의 자원봉사현황 조사 원자료(raw data) 등을 활용
- ② 우리나라 자원활동관련 단체의 홈페이지 자료
- ③ 자원봉사시행계획
- ④ 자원봉사활동기본법

3.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우리나라여성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에 관한 연구 (이강현 외, 2003)	-2002년 설문조사를 통한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현황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기술 통계 분석
	2	-자원봉사의 경제적 분석 (박태규 외, 2004)	-문헌연구 -계량분석에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분석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분석에 의한 자원봉사 결정요인 분석 -성별에 따른 특성을 많이 고려되지 않음 (성별변수를 더미변수 처리함)
	3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권태희, 2003)	-추계방법을 활용한 무급노동가치추정	-1999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20세 이상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 추정 -집안에서의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함
	4	-여가와 사회자본 및 인적자본 투자 간의 시간 배분 분석 (김태홍 외, 2005)	-자원봉사 참가 및 시간결정요인 분석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하여 자원봉사 참가 및 시간결정요인을 분석함 (성별변수를 더미변수 처리함)
	5	-성별 기부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주, 2006)	-문헌연구 -계량분석에 의한 금전적, 시간적 기부의 결정요인 분석	-설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계량분석에 의한 자원봉사 결정요인 분석
	6	-기부문화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방안 (손원익, 2007)	-문헌연구 -한국 및 주요국의 기부금관련 세제 검토	-금전적 기부금을 중심으로 기부금관련 세제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II. 자원활동의 개념 및 정의, 주요 선행연구

1. 자원활동의 개념 및 정의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 여성자원활동의 개념 및 정의

2. 자원활동의 동기

○ 자원활동 관련 개인의 효용함수 추정

- 노동시간의 자발적인 기여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경제학적 모형	사회학적 접근 모형	개인의 효용함수
공공재 모형 Public Goods model	순수 이타심 모형 (Pure Altruism model)	$u_i(x_i, g_i + G_{-i}^*)$ x_i : 사용재 g_i : 기부금 수준 G_{-i}^* : 타인에 의해 공급된 공공재, $G_{-i} = \sum_{j \neq i} g_j$ $g_i + G_{-i}^*$ 는 기부금의 총합
사적소비모형 Private Consumption model		$u_i(x_i, g_i)$ x_i 는 사용재, g_i 는 자발적 기여수준
혼합모형 Mixed Public-Private Goods Model	비순수 이타심 모형 (Impure Altruism model)	$u_i(x_i, G, g_i)$ x_i : 사용재 g_i : 기부금 수준 G : 공공재 총량, $G = G_{-i} + g_i$ (기부금 g_i 가 공공재 G 에 포함됨과 동시에 사용재 형태로 효용함수에 포함)
기타 모형	이타심의 동기에 의한 자선이나 기부행위/체면(prestige)의 동기에 의한 자선이나 기부 행위	$u_i = u_i(x_i, y_i^e(g_i) - g_i)$ x_i : 사용재, g_i : 기부금 수준 $y_i^e(g_i)$: 타인에 의해 예상되어지는 소비자 i 의 소득수준 $y_i^e(g_i) - g_i$: 신호화 된 순소득 (signaled net income) '지위': '신호화된 순 소득'에 의해 결정

3. 자원활동여부, 자원활동시간

○ 자원봉사의 참가와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들

- Freeman(1997) :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자원봉사시간함수를 추정.

Carlin(2001): 미국기혼여성의 자원봉사노동공급함수를 분석.

Menchik and Weisbrod(1987): 자원봉사공급을 자원봉사의 기회비용, 개인의 능력과 소득, 시간보다 금전을 기부하는 교차가격 기회비용(cross-price opportunity cost), 금전적 소득과 자선에 대한 개인의 선호벡터(vector), 자원봉사노동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공급 정도의 함수로 설정

Yamauchi(1997), Sanwa Sogo Kenkyusho(2000): 연구에서도 베커의 가계생산활동모델을 사용하여 자원봉사공급함수를 유도하여, 추정

Garcia and Marcuello(2002): 스페인의 자료를 사용하여 가족의 노동공급모델을 추정

Smith(2004): 미국의 미조리주 중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참가함수를 추정 등

Ⅲ. 외국의 자원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1. 주요국의 개인기부금에 관한 조세지원

- 조세혜택이 인정되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국가별로 요구하는 개별적인 요건들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교, 교육, 보건, 복지, 예술, 문화, 환경, 동물보호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기부금에 대한 국가별 세제혜택 방법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 중 소득공제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 한국, 독일, 일본, 영국, 대만이며, 프랑스만이 세액공제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표] 주요국의 개인기부금 조세지원 개요

소득공제인 경우		세액공제인 경우	
미국	소득금액의 50% 또는 30% 한도내	프랑스	기부액의 66% 세액공제 (과세소득의 20% 한도)
영국	기부금액의 22% 또는 40%, 공제 한도 제한은 없음		
일본	(기부금액(소득금액의 30% 한도)-5천엔) 소득공제		
대만	소득금액의 20%		
한국	소득금액의 100%~10%		
독일	10% 또는 5% 한도내(개정안: 20%)		

주: 한국의 경우, 개인기부금의 공제 한도가 법정기부금(100%), 특례기부금(100%, 50%), 지정기부금(10%)에 따라 다름

2. 주요국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세지원

3. 미국

- 클린턴 행정부에 와서는 국가봉사단(CorporationsforNationalService:CNS)을 조직하고 지금의 부시 행정부에 와서는 새로운 국가봉사단(USA Freedom Corps)으로 전면 확대하는 등, 미국은 그간 자원봉사 국가(volunteerstate)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조직적인 정책으로 연방정부가 자원봉사 정책을 주도해 옴.

가장 확고한 법적 기초를 갖고 있고, 가장 광범한 제도, 즉 연방정부조직부터 주정부와 시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전국이 자원봉사 네트워크로 거미망처럼 연결되어 있음. 이런 정부 전달체계에 못지않게 민간 전달체계가 먼저 조직화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식 다원주의의 특색이 있다. 자원봉사센터들이 지방 단위로 확대, 조직화되면서, 촛불재단(PointsofLightFoundation)등전국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진흥하는 역할을 맡다가 정부 전달체계가 확립됨.

- 연방정부의 진흥정책
- 국가봉사단(USA Freedom Corps) : ① 어메리코어(AmeriCorps), ② 봉사학습(Learn& ServeAmerica), ③ VISTA(VolunteersinServicetoAmerica), ④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NationalSeniorVolunteerProgram)

4. 영국

- 영국의 자원봉사 비율은 최근 꾸준히 상승. 1990년대 중반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34%로 나타났지만,가장 최근 1997년에 조사한 결과는 48%.
- 영국에서의 자원 봉사관련 정책으로는 1990년의 국가 보건 서비스 및 지역사회 보호법과 같은 일련의 법률제정을 통해 복지 분야에 있어 자원봉사영역의 역할을 강조. 블레어 집권 후,노동당 정부는 청년 실업자의 지역사회봉사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식의 전국 시민자원봉사단을 적극 추진, 1997년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밀레니엄 봉사단(Millennium Volunteers)을 창설하여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에 활용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지역단위로 무수한 민간 자원봉사센터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활동함. 정부의 담당 부서는 내무성의 자원봉사사무국이며, 여기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하지만 주요 의사결정은 아래의 주요 전국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함.
- 영국자원봉사센터연합회(NAVVB)

- 전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NCVO)
- 전국자원봉사 활동센터(National Centr for Volunteering)

5. 일본

- 일본은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비영리단체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입법에 따라 1998년 3월에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제정되었음. 이 법은 자원봉사단체 등 많은 단체가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구좌의 개설과 부동산 등기 등의 법률행위를 단체명으로 할 수 없는 불편과 사회적 신용도가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됨. 보건,의료,복지의 증진을 위한 활동 등 12종의 특정비영리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면 민간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 기존의 공익단체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경제기획청 장관의 인증에 따라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으로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함.
- 동경볼런티어는 각 단체들에게 무료로 회의장을 제공하거나 도서 및 비디오대출,자원봉사기금마련,자원봉사활동에 자금지원,자원봉사활동 중의 사고에 대비한 자원봉사보험 접수 등을 제공하고 있음.

6. 기타

- 네덜란드의 경우, 자원봉사활동과 연관된 경비는 기관이 부담하고 자원봉사자는 기관으로부터 주당 dfl40을 받을 수 있다.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물질적 손상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며,봉사활동 도중 타인에게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기관이 전격으로 책임을 지며 난민이나 이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자원활동 기간 중의 법적인 신분이 보장됨.
- 프랑스의 경우는 크게 시간제 자원봉사(bencvolat)와 풀타임 자원활동 (Voluntariat)으로 나누는데, 시간제 자원봉사는 사회적 권리나 보장이 없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대표적으로 자원봉사자의 활동 기간 중 사고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풀타임자원봉사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자원활동과 자원소방관이 있는데,개발도상국 자원활동은 최소한 2년 간 수혜국의 일반적인 이익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하며,자원봉사 소방관(프랑스 소방관의 90%)은 정규소방관이 부족할 경우에만 활동을 하며 둘 다 재정적 보상과 법적인 지위를 갖음.

IV. 우리나라 자원활동의 현황과 여성 이슈

1. 우리나라의 자원활동 관련 법 및 정책

가. 자원활동기본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나. 소득세법 §34의2, 소득세법 시행령 §81⑤,⑥

○ 특별재난지역 봉사활동 기부금 공제

특별재난지역 봉사활동 기부금 공제

☐ 내용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자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에서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

☐ 봉사활동에 대한 가액 산정

- ①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
- ②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단, 소수점이하는 1일로 계산)
- ③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틸비·재료비 등은 제공할 당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

☐ 관계법령

- 소득세법 §34의2, 소득세법 시행령 §81⑤,⑥

☐ 공제시 첨부서류

-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6의2 서식)
-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확인서 제출

- 회사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자체장에게 공문으로 전체인원에 대해 일괄 확인을 받아 보관하는 경우는 근로자 개개인별로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특별재난지역이란 ?
-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국무총리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다. 자원봉사진흥시행계획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매 5년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제1차 5개년 국가기본계획 수립('07. 7. 10)
 -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2008년도 시행계획 수립
- 국가기본계획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9조 1항에 근거
 -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일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추진시책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0조에 근거
 - 2008년도 시행계획 요약
 - 2008년도 시행계획은 10개 부·처·청 및 지자체에서 추진할 자원봉사활동 진흥 제1차 국가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정책과제임
 - 정책과제 구성은 사업개요(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 및 '08년도 추진계획(사업목표, 추진내용, 사업투자계획 등)으로 요약 기술
 -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 '07. 8월, 시행계획(안)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심의 : '08. 2월말

- 5대 정책영역, 13개 정책과제, 35개 세부과제

2. 우리나라 여성의 자원활동 현황

○ 우리나라 여성자원활동의 발전과정

-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은 20세기 초 기독교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부터 소규모 자선적 사회봉사활동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에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해옴.(한국여성개발원, 1993: 16쪽).
- 여성이 주축이 되어 자원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21년 마이어스(Mary D. Myers)선교사가 태화 기독교 여자관을 설립하면서 여성계몽 및 교육, 아동보건사업을 실시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여성들의 자원활동 참여가 크게 늘어나 여성자원 활동은 전환기를 맞게 됨. ‘자원봉사’가 대중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학생, 노인, 직장인 등 다양한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서 성별로 분리된 여성들만의 활동이 아닌 시민참여활동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함께 활동 내용도 사회복지서비스분야 뿐 아니라 환경보호운동, 소비자운동, 교육환경개선 운동 등으로 확산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여성자원활동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자원활동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음(김성경, 1999: 45쪽; 박영란 외, 1999:15쪽).

○ 우리나라 여성자원활동의 현황

- (사)볼런티어21의 2005, 2008년 한국인의 자원봉사현황 조사 원자료(raw data)등을 활용하여 분석
- 우리나라 자원활동관련 단체의 홈페이지 자료 분석 및 주요 실무자 면접
 - 여성 관련 자원봉사단체
 -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협의회의외원단체

3. 우리나라 여성자원활동 관련 주요이슈 도출

○ 상기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자원활동과 여성이슈들을 도출

- 여성이 자원봉사 인구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또는 인력의 활

용 면에서는 긍정적

- 그러나 자원활동의 대부분이 ‘보호제공서비스’로 사회복지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이는 가정에서 주부들이 행하는 ‘보살핌노동’과 유사(남세진, 노옥재, 1997)
- 현재 여성 자원 활동과 관련되는 논의는, 많은 여성들이 자원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회복지분야의 단순노력봉사’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로 봉사하는 인력, 적극적으로 자원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임(박영란 외, 1999: 19쪽).

V. 여성자원활동의 경제적 가치

1. 모형의 설정

$$u_i = u_i(x_i, m_i, w' h_i, l)$$

$$u_i = u_i(x_i, m_i, h_i, l)$$

$$u_i = u_i(x_i, m_i + w' h_i, l)$$

$$\text{s.t. } x + (1 - t_1)m + (1 - t_2)wh + (1 - t_2)wl = (1 - t_2)wH$$

where, t_1 : 기부금 공제세율,

t_2 : 자원봉사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공제세율,

w : 시장임금,

H : 시간의 초기부존량

l : 여가시간

<축약형 모형 1>

$$\begin{aligned} \ln(\text{time} + 10)_i &= \alpha_0 + \alpha_1 \ln(\text{inc2} + 10)_i + \alpha_2 \ln(\text{mtotgiveprice})_i \\ &+ \alpha_3 \ln(\text{timegiveprice})_i + \alpha_4 (\text{demographic characteristics})_i + \nu_i \end{aligned}$$

<축약형 모형 2>

$$\begin{aligned} \ln(\text{timemon} + 10)_i &= \alpha_0 + \alpha_1 \ln(\text{inc2} + 10)_i + \alpha_2 \ln(\text{mtotgiveprice})_i \\ &+ \alpha_3 \ln(\text{timegiveprice})_i + \alpha_4 (\text{demographic characteristics})_i + \eta_i \end{aligned}$$

2. 여성자원활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 개인의 자원활동함수의 추정을 이용하여 임금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을 구함
- 효용함수로부터 추정된 자원활동의 시간분포를 작성·분석
- 추정된 자원활동의 시간 및 경제적 가치 평가
-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을 이용하여 자원활동의 가격탄력성 추정하고 세제지원 효과를 분석·예측

VI. 여성자원활동의 세제지원 및 정책발전 방안 등을 제시

- 실증적 분석을 통한 고학력 여성인력 참여 활성화 논의의 근거자료 제공
- 경제·사회 선진화를 위한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자원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 및 세제지원 효과분석에 기여
- 여성인력의 활용가치를 극대화 정책 및 자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등 세제, 관련정책 개선에 근거를 제공

VII. 참고문헌

- 권태희,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2003.
- 김태홍 외, 『여가와 사회자본 및 인적자본 투자 간의 시간 배분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2005.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신경제사회질서 구축을 위한 노동, 실업, 복지정책 보고서』, 1998, 7.
- 이강현 외, 「우리나라여성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2003.
- 이창호, 『민간의 실업·고용대책 참여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8.
- 박태규 외, 「자원봉사의 경제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004.
- 불런티어 21, 「2005 한국인의 자원봉사기부현황 조사연구」, 2006.
- 손원익,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7.7.
- 조선주, 「성별 기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2006.

Andreoni, James(1988), "Privately Provided Public Goods in a Large Economy: The Limits of Altruis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5(1), pp.57-73.

_____(1989), "Giving with Impure Altruism", Applications to Charity and Ricardian Equival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pp. 1447-58.

_____ & W.G. Gale and J.K. Scholz(1996), "Charitable Contributions of Time and Money", July 1996.

Brian Duncan(1999), “Modeling charitable contributions of time and mone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2, pp. 213-242.

Kettner, P.M., & L.L. Martin, "Purchase of Service Contracting: Two Models",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14(1), 1990.

Salamon, L., *Partnership in Public Servic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VIII. 연구추진일정

[illegible]

◆ 제 2 부 ◆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의
2008년도 연구성과발표회 및
2009년 착수보고회

❖ 2008년도 연구성과보고-1 ❖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Ⅱ) :
성인지 예산서(안)의 시범작성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연구진 및 연구기간

○ 연구기관 및 연구진

- 연구책임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 공동연구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주, 마경희, 이선행
지방재정학회/ 윤영진
조세연구원/ 박노옥

○ 연구기간: 2008. 1. 1 ~ 2008.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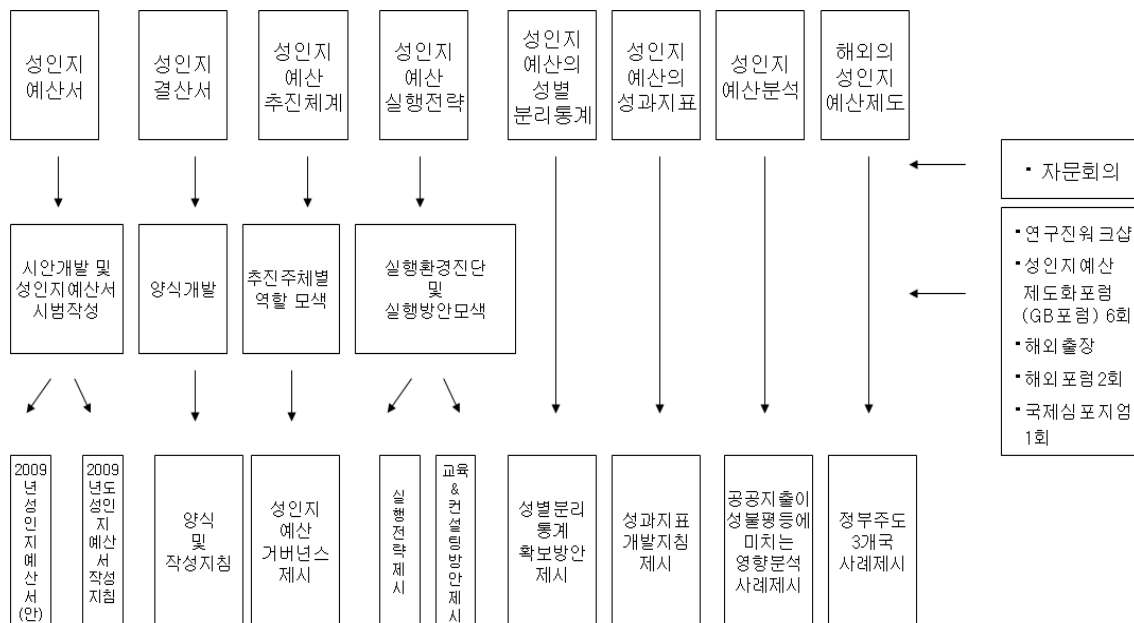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2007년도부터 총 3년간의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의 2차년도 연구임.
- 2007년도에 수행된 1차년도 연구는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개념과 방법론 등 기초적인 영역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음.
- 이 연구가 수행된 2008년도에 정부는『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0회계년도부터 적용될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양식, 대상사업 선정 기준 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들간의 역할분담과 조정협력체계, 그리고 공무원 교육 및 성별통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작업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2차년도 연구는 정부 내에서 제도로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도구와 절차에 비중

을 두었음.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하였고, 성인지 예산서를 포함한 성인지 예산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를 개발하였음.

2. 연구내용

- 2007년도에 개발한 성인지 예산서 양식을 수정·보완하여 성인지 예산서 를 시범적으로 작성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성인지 결산서 양식과 작성 매뉴얼을 개발하였음.
- 해외의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를 검토하고, 정부기관의 담당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여건을 점검한 후 기획재정부와 여성부, 전문가 집단 등 관계 기관의 협력 및 추진 체계와 실행전략을 모색하였음.
- 성인지 예산과 성과관리 예산 제도의 연계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지침을 마련하였음.
-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국내외의 다양한 성인지적 예산 분석 사례를 수집하여 소개하였음.



[그림] 2008년도 연구내용

3. 연구방법

- 이 연구에는 경제학, 재정학, 행정학, 사회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음.
- 연구결과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6차례에 걸쳐 “성인지 예산 포럼(GB포럼)”을 개최하였음.
-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세계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다양한 국가에서의 시행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였음. 이 심포지움은 한국의 성인지 예산을 해외의 전문가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
-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로서 성인지 예산 분석 및 성별분리통계 생산 기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스위스의 바젤과 쥐리히,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와 바스크 주정부를 방문하였음.
- ‘성인지예산센터’의 웹사이트(Gender Budget Net: <http://gb.kwdi.re.kr>)을 운영하여 성인지 예산 관련 정보와 연구 결과를 폭넓게 공유하고자 하였음.

4. 연구결과

-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11권의 단위 연구보고서와 1권의 총괄보고서가 산출되었으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성인지 예산 제도화 연구(II) 보고서의 구성

연구보고서 명	연구수행기관
2008 연구보고서 6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I): 성인지 예산서(안)의 시범작성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연구보고서 6-1 『성인지 예산서(안) 시범작성 및 결산서 양식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연구보고서 6-2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실행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8 연구보고서 6-3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개발 지침』	한국조세연구원
2008 연구보고서 6-4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연구보고서 6-5 『해외의 성인지 예산: 정부주도 3개국 심층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연구보고서 6-6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연구보고서 6-6-1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1): 산재보험 급여지급의 성불평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연구보고서 6-6-2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2): 건강보험 급여의 성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연구보고서 6-6-3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3): 장애인 복지 공공지출의 성불평등 영향 분석』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연구보고서 6-6-4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4): 성폭력 관련 공공지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연구보고서 6-6-5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공지출의 성인지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가.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 시안

-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회계년도부터 정부는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함.
- 그 동안 성인지 예산서가 발간되고 있는 해외의 국가 사례에 대한 연구, 국내 현실에 맞는 성인지 예산서의 형식과 사업별 성인지 예산안 작성 지침 및 양식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실제 이를 적용하여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음.
-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제출해야 할 성인지 예산서의 구체적인 형태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목 차	상세내용	작성 기관
I.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사업 개요		
1. 성인지 예산제도 개요 2.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사업 3. 시범사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제도도입 초기이므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 목적, 의의, 법적 근거, 추진경과 및 향후 개선 방안 등을 기술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	기획 재정부
II. 성평등 정책의 목표와 재정운용 추이		
1. 성평등 정책의 비전과 목표	-현재 성평등 수준과 향후의 방향을 주요 통계지표를 통해 제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한 성평등 정책의 목표 기술	여성부
2. 정책성과 및 재정운용 추이	-지난 3-5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성과와 재정투자 현황	
III. 2009년도 성인지 예산안 개요		
1. 총괄표	-국가 총예산 대비 양성평등정책 예산, 성평등 분석 사업 예산의 비중, 전년도 대비 증감율	기획 재정부 · 여성부
2. 2009년도 양성평등정책 예산 내역 1) 자원배분의 중점 2) 소관별 3) 기능별 4) 여성정책기본계획 목표별	-2009년도 양성평등정책 예산의 주요 내역을 기술 -양성평등정책 예산의 소관별, 기능별, 여성정책 기본계획 목표별 비중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기술	

3. 일반예산 성평등 분석 1) 소관별 2) 기능별 3) 여성정책기본계획 목표별 4) 기대효과	-일반예산에 대한 성평등 분석 사업 예산의 소관별, 기능별, 여성정책기본계획 목표별 비중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기술 -성평등을 고려한 자원배분의 기대효과를 기술	
IV. 사업별 설명서		
1. 교육과학기술부 1) 성평등 정책 목표와 재정운용 방향 2) 사업총괄표 3) 사업설명서 2. 외교통상부 . . (이하 생략)	-사업 소관부처별로 양식에 따라 제출된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첨부함. 1) 성평등 정책 목표와 재정운용 방향은 각 부처의 성평등 관련 주요 정책 현황, 성과, 재정추이 및 2009년도 자원배분 방향제시 2) 사업총괄표는 양성평등정책 및 일반예산 성평등 분석 사업별 예산내역표를 제시 3) 사업설명서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각 부처 재정총괄담당 및 사업담당

※ 국내·외의 유사사례

▶ 프랑스『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예산서』(2007)

-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부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예산서』를 제출하고 있음.
- 우리와 유사하게 성인지 예산서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2007 회계 연도 예산서는 ① 서문 ②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영역별 추진 현황 ③ 성평등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노력 ④ 지방정부의 주요 성평등 사업 예산과 프로그램 개요 등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됨.
- 이 중 세 번째 장인 「성평등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노력」이 예산서의 중심적 내용으로 모든 부처의 성평등 관련 정책 현황 및 예산, 관련 통계지표, 주요 일반 사업 수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함.

▶ 스웨덴『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 배분』(2007)

- 2003-2004회계년도부터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로 발간되고 있음.
- 프랑스와 달리 각 부처별 사업별 분석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 배분의 차이와 관련된 주제 중심의 다부문 분석 보고서임.
- 예산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됨. 하나는 경제활동인구(20-64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성별 차이 분석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다루어짐. 다른 하나는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특별 주제(부모역할이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 파트타임 노동 등)를 선정하여 다룸.

나. 성인지 예산 제도의 추진방안

- 성인지 예산의 추진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평등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시행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는 것임. 성인지 예산 제도 운용의 목표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음. 기획재정부의 성인지 예산 운용목표는 이를 중심으로 지침에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성인지 예산의 추진주체는 행정부의 기획재정부와 여성부가 주축이 되면서 다양한 중앙관서의 협력체계가 중요함.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타부처에 대한 영향력과 성 주류화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성부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우선되어야 함. 기획재정부는 여성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부처간 조정업무와 네트워크 형성의 주체가 됨. 여성부는 성인지적 분석을 위한 업무를 지원, 자문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함.
- 그러나 현재 여성부의 인력과 조직상 다양한 부처의 성인지 예산 편성 업무를 지원하고,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성인지 예산센터를 제도 정착기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각 부처 내에는 스웨덴의 성평등 담당관(gender equality coordination) 또는 인도의 성인지 예산 담당관(gender budget cell)과 같은 담당자가 임명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여성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들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인지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안을 협의·조정해야함.

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방안

-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을 위한 외적 강제력은 부과되어 있지만, 내용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소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
- 우선 내용적 내실화를 꾀하면서 외연을 확대하는 단계별 실행방안이 요구됨.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행가능성이 크고, 성평등 관련 이슈가 명백한 부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함. 2단계에서 예산분석은 1단계보다 심화된 수준일 것이며, 성별분리통계가 확대생산됨으로써 예산분석시 주요 요인들간의 교차분석이 가능해 질 것임. 마지막 단계는 성인지 예산 분석 대상 기관의 외연을 확대하여 모든 중앙관서가 포함되도록 함. 이 단계의 예산분석은 더욱 고도화될 것이며 예산분석과 집행 평가를 하는 부처 담당자들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제도 실행 역량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임.
-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 제도화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인지 예산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와 업무 내용이 정착될 때까지 실무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야 함.

라. 성별분리통계의 확보방안

-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위해서는 성별분리통계의 확보와 함께 실제 예산 자원 배분과정과 관련된 통계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함. 즉 성별분리통계의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예산자원을 배분하는 예산안을 작성할 때 성별분리통계를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임.

- 안정적인 성별분리통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수준에서의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시설·기관 중심의 예산편성이 수요자·수혜자 중심의 시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마.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개발방안

-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부의 예산지출 또는 예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예산지출을 통한 수혜의 양성평등성과 예산사업 결과의 양성평등성임. 수혜의 양성평등성은 예산 지출의 직접적 혜택을 받는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은 사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음. 수혜의 양성평등성은 사업의 수혜자 성비가 정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가, 예산 지원금의 규모에서 성별로 편차가 있지 않은가 정책 만족도가 성별로 등등하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성과지표가 개발될 수 있음. 사업 영향의 양성평등성은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과의 양성평등성과 예산사업이 추진결과 의도하지 않게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이를 위한 성과지표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을 것임.

바.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성인지 예산 활동(gender-responsive budgeting initiatives)의 전제는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이 의도하지 않게 기존의 성불평등 구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성인지적 예산 분석은 이를 가시화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임.
-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성인지적'이라는 용어가 주는 난해함과 모호함,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평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예산에 주목해 오던 성평등에 대한 과거 접근과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원론적 정의가 실제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적 예산 분석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듯함. 성인지 예산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는 이들조차도 성인지적 예산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이들에게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과 동일시되기도 하며, 이는 예산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오해로 이어지기도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무엇이 가시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성인지적 예산 분석 사례를 소개하였음.

※ 성불평등의 사회적 비용 분석사례

- 스웨덴의 “가정폭력의 사회경제적 비용”: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한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26억 9,500만 SEK(약4,600억원)¹⁾에서 33억 SEK(약 5,600억원) 정도

[표] 가정폭력의 사회경제적 비용

구분	항목	million SEK
직접비용	의료서비스 (Health care and medical services)	21-38
	사법체계(Criminal Justice System)	1,098-1,189
	경찰	623
	검찰	171
	법원	153-162
	감옥과 보호관찰	151-235
	사회서비스	706-1,149
	여성쉼터와 피해자 지원센터	73-79
	가해자 남성 치료	44
	중앙정부	17-18
간접비용	사회보험행정	19
	직접비용 합계	1,978-2,536
	생산성 손실	679-720
	자원활동의 가치	38-44
간접비용 합계		717-764
총비용		2,695-3,300

○ 영국의 가정폭력의 비용

-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2001년 연간 가정폭력 총비용은 약 230억 파운드(약 46조원)임.
- 이 중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은 31억 파운드(약 6조 2,000억원).
-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경제적 손실은 27억 파운드(약 5조 4,000억원).
-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비용은 170억 파운드(약 34조원).

1) 환율은 1 SEK 당 약 170원을 적용하였음.

- 미국의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1994)의 비용편익 분석: 1994년 미국 의회는 5년간 경찰, 가해자, 희생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16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the Act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I)을 통과시킴. VAWA-I의 비용은 16억 달러인데 비해, 법 시행 후 148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음. 개인적 수준에서 VAWA-I 은 여성 1인당 지출된 비용은 15.50달러이고, 여성 1인당 159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음. VAWA-I은 재정효율적 사회 프로그램임.

※ 정책 예산의 적절성 분석 사례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부족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예산”

※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분석 사례

- 호주의 모유수유의 경제적 가치 저평가와 공공 정책의 왜곡: 국민 경제에서 모유 수유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밝힘.

※ 노동정책 분석 사례

-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 뉴딜 프로그램은 영국의 신노동당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노동시장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성중립적인 혹은 성별과 무관한 것처럼 보임. 분석 결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리고 프로그램별 지출에서도 성별 차이가 나타남.
- 한국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 복지정책 분석 사례

- 한국의 산재보험급여의 성인지적 개선: 산재보험 배제 집단에서의 성불평등, 산재발생 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의 성별 불평등, 산재보험 급여 지급의 성불평등 등
- 한국의 장애인 복지 지출의 성인지적 개선: 30개 장애인 복지 정책의 성별 수혜귀착 추계,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및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의 성별 수혜 등
- 인도의 장애인 대출 사업 분석

※ 보건의료정책

- 스웨덴의 세탁물 바구니 프로젝트: 광선요법에 의한 습진이나 건선 치료 후 댄더리드 병원(Danderyd Hospital)²⁾ 피부과 환자들은 샤워를 하고 수건을 세탁물 바구니에 넣음. 간호

2) 댄드리드 병원 피부과(DH-unit)는 스톡홀름에 있는 네 개의 피부과 중 하나이며, 350,000명을 관할. 연간 외래 환자는 15,000명.

사들은 병원 직원회의에서 세탁물 바구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두 가지 피부병 치료를 위한 의료재원 사용에서의 젠더 차이에 대한 연구로 이어짐.

- 한국의 산재보상보험 급여

※ R&D 정책

- 스웨덴의 연구비의 성별 분배

5. 향후 과제

- 장기적 과정으로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함. 성인지 예산은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며, 성불평등의 역사만큼 장기적인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함.
- 현재 성인지 예산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성인지 예산 제도의 지평이 확대되어야 함. 예산서의 예산분석이 보다 심화되기 위해서는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사업에 암묵적으로 내포된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
- 당면한 과제로서 성인지 예산 제도를 주도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 내 추진기구가 만들어져야 함. 각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권한이 적절하게 주어질 때 향후 안정적인 제도 추진이 가능해 질 것임.

❖ 2008년도 연구성과보고-2 ❖

근로장려세제(EITC)와 여성의 노동공급 : 실증분석과 정책과제

■ 연구진 및 연구기간

○ 연구기관 및 연구진

- 연구책임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주
- 공동연구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이선행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정진욱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임병인

○ 연구기간: 2008. 1. 1 ~ 2008. 12. 3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EITC)는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소득을 지원함은 물론, 소득과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008년 1월 1일 시행의 첫발을 내딛었음.
-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전체 빈곤층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6.6%, 경찰빈곤층 중에서는 51.2%, 근로빈곤층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임. 특히 자녀를 둔 여성 한부모 가구의 규모는 여성가구주 중 25%를 차지하며, 절대빈곤선의 150%까지 대상을 확대할 경우, 여성 한부모 가구주 가구의 37.4%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여성빈곤의 문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차별현상과 연결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 이러한 여성의 경제자립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회활동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조세·재정정책은 이러한 실정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지금까지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심층적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음. 그 간 조세·재정정책과 노동시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성별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포괄적 연구였으며, 여성의 노동공급과 조세·재정정책에 관한 연구는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또한 저소득층 근로유인에 관하여는 실증연구보다 개괄적인 연구가 대부분임.
-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장려장려세제의 시행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즉, 노동공급 의사 결정)와 근로시간(노동공급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음. 이에 가구단위의 정책집행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성별에 따라 노동공급의 의사결정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음. 또한 여성 가구주 및 '2차 소득자로서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에 더 중점을 두었음. 이에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및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써 개선 및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음.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 국내외 각국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주요 선행연구 검토, 국가별 EITC 사례 분석
-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과 여성이슈 분석
- 여성의 노동공급함수 도출 및 실증분석을 위한 축약형 방정식의 제시, 한국복지패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장려세제 시행이 여성에게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줄 것인가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근로시간 측면으로 나누어서 실증 분석
- 실증분석을 통한 근로장려세제의 여성경제활동촉진 및 근로복지를 위한 제도로써 정착, 발전하는데 필요한 방안 모색

나. 연구방법

-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발전과정, 관련 이론 등을 알아보기 위한 국내외 문헌 고찰
- 각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터넷 및 홍보자료 등을 통한 자료 수집, 근로장려세

제에 대한 각국의 제도 현황과 국내외 실증분석결과의 비교분석,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현황과 여성이슈와의 관계 분석

-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은 아직 지급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공급모형을 이론적으로 도출,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근로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
-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정책제언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근로장려세제 관련 전문가와 유관단체 관련자들의 의견 수렴 및 추정된 실증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세미나 등의 개최

II. 이론적 논의와 주요 실증연구

- EITC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면, 가격효과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EITC 유형 제도가 근로자에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노동공급이 결정됨. 이론적으로 EITC 유형제도가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거나 불확실함. 그러나 이론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시간 공급은 대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EITC의 시행에 따라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이전에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던 근로자들이 자신이 받는 실효임금(effective wage)의 증가를 이유로 하여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유인을 갖게 되기 때문임. 이와 동시에 해당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낮아 여가에 대한 선호가 강하지 않는 이유도 작용함.
-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EITC가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론적인 예측과 달리 EITC의 노동공급효과가 계층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즉, EITC가 저소득계층의 노동시간을 줄였다는 실증연구(Browning, 1995; Kosters, 1993)와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증연구(Eissa & Liebman, 1996; Meyer & Rosenbaum, 1998)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EITC가 종합적으로는 노동공급량을 증가시켰다는 실증연구(Ellwood, 2000; Liebman, 1998; Scholz, 1997)도 주장되고 있음. 따라서 실증연구에 의해서도 EITC와 노동공급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여성의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다수의 연구(Blank, et al., 1999; Dicket et. al., 1994)들이 여성들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켰다는 분석에 동의하고 있음. 이 연구들은 복지제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이 EITC 제도에 의해 복지급여 대신 취업을 하도록 유인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함.
- 이와 함께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

석 결과를 저학력(혹은 저소득) 기혼여성에 한정하여 검토하였음. 대상을 저학력 기혼여성에 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녀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동 집단의 여성들은 EITC의 직접적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그 결과, 미국의 EITC 확대가 저소득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낮춘다는 Edgerton(2002) 및 Eissa & Hoynes(1998), 유지영·정영순(2007)의 선행연구와 영국의 WFTC가 근로시간이 짧은 편부모의 근로의욕을 강화시키는 한편 배우자 중 한 명이 전일제로 일을 하는 경우 다른 한쪽의 근로시간을 감축시킨다는 Blundell, Duncan, Meghir, & McCare(1999, 2000)의 선행연구가 있었음.

Ⅲ. 국가별 EITC 운영사례

- 현재 EITC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7여개국이며, 동 제도는 각국의 사회여건과 관련제도, 그리고 사회보장체계 및 도입목적에 따라 제도상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가 일정 수준의 면세점을 설정하고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이 그 면세점 수준이하라면 정해진 기준액만큼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임. 미국 정부는 1975년에 이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제도적 보완을 거듭하여 옴. 미국에서의 EITC는 미국 내 저소득근로계층이 부담하고 있었던 사회보장세의 보전을 통해, 저소득근로계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음. 현재 운영형태는 최대급여 연 4,716달러 수준임(2007 회계연도 기준).
- 영국의 근로장려세제는 1988년에 도입된 ‘In-Work benefit’의 형태를 띤 FC(Family Credit)로 대표되며, 1999년에 FC를 보다 확장하여 WFTC를 도입함. 2003년에는 이 WFTC를 WTC(Working Tax Credit)와 CTC(Child Tax Credit)로 개편하고 기존의 아동수당과 실업수당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음. WTC가 미국의 EITC와 다른 점은 점증구간이 없고, 수급자격이 연간 근로소득이 아닌 주당 근로시간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에 비해 점감률이 높은 편이고 급여액 수준 또한 높다는 것임.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추가급여가 지급됨.
- 프랑스의 근로장려세제인 PPE(Prime Pour l'Emploi)는 기존의 최빈층 생계지원제도인 RMI가 가지고 있었던 근로유인에 대한 저해현상을 해결하고, 수혜 대상자들의 취업유인구조 설계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해 2002년에 시행되었음. PPE의 특징은 평탄구간이 없다는 것과 점증-점감구간의 소득상한 및 하한이 최저소득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

로 요약될 수 있는데, 두 번째 특징으로 말미암아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일제 근로자 소득의 30% 미만인 소득에 해당하는 가구가 배제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즉, PPE는 시간제 근무자보다 전일제 근무자를 우대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벨기에의 근로장려세제인 Credit d'impôt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에 도입되었음. 급여체계는 미국 EITC의 유사한 형태이나 프랑스의 PPE처럼 최소소득기준이 적용됨.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급여액 수준이 낮고, 적용소득 범위도 좁은 것이 특징임. 벨기에의 Credit d'impôt 수급대상이 가구단위로 결정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개인단위로 수급대상이 결정된다는 것도 주요한 특징임. 이에 따라 자녀 및 가족 관련 수급요건이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급여지급의 시차로 인한 근로유인 제고효과가 미흡해 도입 3년만인 2005년에 폐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으로 전환됨.

IV.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의 현황과 여성이슈

-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기존의 2대 사회안전망(기초생보, 사회보험)이 차상위 계층의 생활보장 측면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생활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근로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근로장려세제의 목표는 ‘소득보장’과 ‘근로유인 제공’의 크게 두 가지이지만, 여성경제활동참여증가와 관련 근로유인제공의 취지는 매우 중요함.
- 2008년 1월 1일 제도시행시(2008년 12월 19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적용대상 조기확대) 근로장려금의 수급대상은 당해연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가 가구이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임. 또한 1주택이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에 속한 사람이어야 함.
- 급여를 산정하는데 있어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가구단위 적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급여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적용범위가 점증구간(phase-in range), 평탄구간(flat range), 점감구간(phase-out range)으로 구분되는데, 연간근로소득이 0~800만원인 경우 급여액은 근로소득의 16%이며, 800만원~1200만원인 경우 최대급여액이 120만원, 1,200만원~1,700만원인 경우 (1,700만원-근로소득)의 24%임.
- 우리나라는 근로장려세제 도입과정에서 여성가구주 및 한부모 가구, 여성 노동시장과의 연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음. 따라서 근로장려세제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여성 수

급자의 근로의욕을 강화하며, 양성 평등한 근로복지연계제도로써 실효성 있게 정착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효과, 급여지급단위 등의 측면: 전반적인 빈곤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대상자 범위가 너무 협소하며, 지급하는 금액과 1년에 1회 지급하는 시기의 문제 등의 이유 때문임.
- 소득과약률 제고의 측면: EITC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할 것임. 따라서 EITC를 통한 소득과약률의 재고보다는 면세점 인하의 효과와 맞물려 소득을 숨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우려가 있음.
- 여성의 저임금 노동의 양산을 우려하는 측면: 하지만 장기적으로 근로 유인제고, 소득과약률 제고 등의 효과를 가질 것이며, EITC로 인해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저임금노동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V.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과 여성 노동공급효과

- 근로장려세제(EITC)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체탄력성이 일정한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효용함수로부터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하였음.
-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다른 자료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임. 그러나 아직 1차년도 데이터에 대해서만 일반에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오류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함.
- 근로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지급되므로 가구단위로 데이터를 뽑은 후 가구주와 가구원을 모두 포함한 개인의 노동공급함수를 성별로 추정하였음. 분석의 대상연령은 15-64세임. 배우자의 유무와 성별에 따라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남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남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또 다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구분함 (<표> 참조).

[표] 분석유형 구분

	그룹의 특징		그룹
여성	배우자가 있는 유형(type1)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	group1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음	group2
	배우자가 없는 유형(type2)		group3
남성	배우자가 있는 유형(type3)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	group1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음	group2
	배우자가 없는 유형(type4)		group3

1.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 경제활동참가유무의 측면(extensive margin)에서 여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그룹1(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여성이 가구주이거나(1차 소득자)나 편모가구에는 무관한 관계가 나타남. 분석의 대상을 15세에서 55세까지로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음. 이는 편모가구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했다는 다수의 외국의 선행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이 밖에 대도시거주여부, 18세미만의 아동 수, 배우자의 임금 등은 맞벌이 가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의 측면(intensive margin)에서 여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그룹1(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연간 임금이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1% 증가할 때, 연간 근로시간이 약 138시간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됨. 반면, 여성이 가구주이거나(1차 소득자)나 편모가구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부부합산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늘리기 보다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늘리기보다는 근로를 줄임으로서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음.

2.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 경제활동참가유무의 측면(extensive margin)에서 여성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면 그룹1(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과 그룹3(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여성, 편모가구나 여성단독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이 가구주이거나(1차 소득자)인 그룹2에는 무관한 관계가 나타남.

그룹3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한국복지패널과 다른 결과임.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장인 경우는 근로장려세제가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 밖에 18세미만의 아동 수, 부부합산소득 1,700만원여부 등은 맞벌이 가구 여성 및 편모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의 측면(intensive margin)에서 여성의 경우, 그룹1(배우자가 있고(기혼여성),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과 그룹3(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여성, 편모가구나 여성단독가구)의 근로시간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이 가구주이거나(1차 소득자)인 그룹2에는 무관한 관계가 나타남. 그룹3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한국복지패널과 다른 결과임.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저소득층이 많이 샘플링 된 한국복지패널과 도시가계조사를 원자료로 샘플링한 한국노동패널의 자료의 차이라고 보여짐.

VI. 여성친화적 근로장려세제(EITC)로의 발전방안

- 실증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공급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가구 내 남, 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 외국의 다수 선행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편모가구와 여성가장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와 근로시간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것과는 달리 저소득 맞벌이 가구 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와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추정모형에서 고려되지 못한 다양한 제약요인을 포함하더라도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실제의 여성가장가구(그룹2)와 편모가구(그룹3)의 노동시장 참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공급의 효과가 미약한 것은 적용대상자를 일부 근로빈곤층으로 제한(부부합산연간소득 1,700만원 미만)하면서 최대적용소득구간과 점증률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 결과로 보여짐. 그러나, 근로장려세제의 전반적인 효과는 여성들의 취업 및 근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최소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근로장려세제가 여성 근로빈곤층에 대한 효과적인 소득지원정책 및 근로유인강화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최대적용소득구간을 연장하여 수급가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수급가구를 세분화하여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근로장려세제의 발전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

- 저소득층 여성의 실효임금(effective wage)증가 효과(근로의욕고취), 빈곤감소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급여액을 보다 현실화해야 함. 제도 도입초기 급여 상한액인 연 120만원의 현금 급여는 탈빈곤을 도모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므로 빈곤감소와 소득재분배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급여액이 일정액 이상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세제의 세부설계와 관련하여서는 가구의 유형 및 개인의 유형(예, 맞벌이 가구 내 여성, 홀벌이 가구 내 여성, 편모인 여성 등)에 따라서 급여체계를 차등화하여 이들 가구의 2차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감소 효과를 완화시켜야 할 것임.
- 이와 아울러 2차 소득자로서 여성 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개인 단위의 소득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고려해야만 함.
- 근로장려세제가 여성 한부모 가구 여성들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동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수에 따른 급여수준의 차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제도개선도 요구됨.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 여성근로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통해 노동수요를 확대하는 등 경제·사회적 측면의 지원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2009년도 착수보고 ❖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Ⅲ)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추진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I. 연구배경 및 목적

- 2009년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성인지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임. 정부는 2008년도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서 시안 개발이라는 성과를 거둠. 그러나 성인지 예산 제도는 이제 첫발을 내딛었을 뿐이고,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다양한 시행착오와 난관이 예상됨.
- 2008년도의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은 성인지 예산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에 비해 동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와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임. 자신의 업무가 성평등 문제와 무관하므로 분석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공무원들이 많았을 뿐 아니라 성인지적 예산 분석에 필수적인 지식과 물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시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와 동시에 다양한 주체들의 제도 추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에 성인지 예산 제도화 연구의 3차년도인 2009년도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함.
 - 첫째,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수용도를 진단하고 동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향후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둘째, 시민사회가 성인지 예산활동을 주도하는 국가들에 대한 사례조사와 국내 여성단체와 예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예산 포럼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시민사회와 국회의 참여방안을 도출하고 성인지 예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

- 셋째, 다양한 성인지 예산 분석 사례 축적 및 알기 쉬운 안내서 발간 등을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확산하고자 함.

II. 전년도 연구와의 연속성 및 차별성

- 2007년 1차년도에는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개념과 방법론 개발에 초점을 맞춤.
 - 국제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론적, 학문적 개념, 다양한 국가들에서의 성인지 예산 시행 현황과 경험을 검토하였음.
 -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및 지침 개발
 - 중기재정운용계획, 프로그램 예산제도, 성과관리 제도 등 재정제도 개혁의 성인지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해외의 성인지 예산 시행 현황을 분석하였음.
- 2008년 2차년도에는 정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행도구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하였음.
 - 1차년도에 개발한 성인지 예산서 양식을 수정·보완하여 성인지 예산서 시안을 작성함으로써 정책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인지 예산서 모델을 제안하였음.
 - 성인지 예산 제도 추진체계와 단계적 실행방안,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 성별 분리통계 확보, 성과지표 개발 등 제도의 효과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음.
 - 국내외 성인지 예산 분석 사례 발굴을 통하여 대중적 이해를 확산하고자 하였음.
 - 인도, 호주, 스웨덴 등 해외의 정부주도 3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였음.
- 2009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진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할 것임.
 -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공무원 의견조사와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개최
 -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모니터링
 - 시민사회 주도 3개국(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캐나다)에 대한 심층 연구
 -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도출
 - 성인지적 예산 분석 사례 축적 및 홍보책자 발간

Ⅲ. 총괄보고서 목차(안)

I. 서론

II.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분석 및 함의

III.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1. 연구개요
2. 2010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3. 2010년 성인지 예산서와 추진체계 분석·평가
4. 2010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정 모니터링
5. 향후 개선방안

IV. 시민단체 참여 활성화 방안

1. 연구개요
2. 성인지 예산 활동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협의체 (거버넌스) 모델
3. 해외의 성인지 예산 사례: 시민사회 주도형 국가
4. 한국의 시민 단체 성인지 예산 활동
5. 시민사회 참여 방안
6. 요약 및 시사점

V.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 연구개요
2. 성인지 예산분석 방법론
3.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4.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위한 의제 개발
5. 요약 및 시사점

VI. 요약 및 결론

부록

IV. 단위보고서와 사업내용

총괄보고서 章	연구방법	단위보고서	관련 사업내용
II.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공무원 설문조사 및 포 커스 그룹 인터뷰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	-
III.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대상사업 담당자 인터뷰 -“I.설문조사”결과 활용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컨설팅단 기획 및 운영 -기획재정부, 여성부 업무 지원
IV.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문헌연구 -단체, 국회의원 포럼	해외의 성인지 예산: 국회, 시민사회 주도 형 국가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 아카데미 운영 -성인지 예산 포럼 기획·운영 (→포럼운영보고서)
V.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문헌연구 -통계분석, 질문지 조사 등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워크숍
* 국·영문 안내서 발간	-기존 연구 정리	알기쉬운 성인지 예산? Gender Budgeting in Korea	-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

I. 연구배경 및 목적

- 성인지 예산 제도는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정책의 핵심 수단인 예산이라는 언어를 통해 가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또한 예산이 여성과 남성, 기존의 성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여 예산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므로 자원 배분의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게 될 것임.
-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의 도입 자체가 곧 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제도로써 성인지 예산은 실제 정책 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도구, 시스템을 필요로 함.
-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자면, 2008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사업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서 시안이 개발되었고, 대상사업 선정, 예산서 작성 양식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단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적용을 위한 기술적 도구나 절차 이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상사업의 확대방안, 추진체계,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제도들과의 연계 방안 등 향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및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아직 초기단계이니 만큼 제도화 시스템에 대한 커다란 기대를 하는 것이 과도한 욕심일 수는 있겠지만 향후 장기적 안목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다양한 정책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임.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이를 추동할 수 있는 시민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임. 가장 이상적인 제도적 장치들이라 할지라도 정부기구 내외의 정책 주체들간의 합의와 공감대에 기초하지 못한다면, 현장

적합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평등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부처의 다양한 사업들을 포괄하게 되므로 제도 시행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제도의 정착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이해와 관심, 참여 역시 중요함. 정부가 제출하는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저조할 경우 예산서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문서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이 연구는 향후에 안정적인 제도 추진과 정착을 위해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도, 대상사업 적절성에 대한 자체평가 등 제도 도입 여건을 진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제도 운영 과정상의 주요 선택 사항 및 쟁점에 대한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효과적인 제도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II. 연구방법

1. 질문지 조사

가. 조사개요

조사대상	조사목적	조사방법
중앙행정기관 일반 공무원	-성인지 예산 제도 수용도 진단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 일반직 공무원 1,000명 표본 조사 -배포조사(조사원 활용)
세부사업 담당 공무원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확대 가능성 진단 및 확대 방안 도출	-단기간에 적용가능한 대상사업 담당 공무원 1,000여 명 전수조사(e-mail 조사)

- 중앙행정기관 일반 공무원과 세부사업 담당 공무원은 중복되지 않음.
- 중앙행정기관 일반 공무원 조사
 - 성인지 예산 제도와 관련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의견 수렴
- 세부사업담당 공무원
 - 2009년도 세부사업 중 사업의 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업 담당 공무원.
 -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업들은 현재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으로 개발된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한 사업들로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적용이 용이하다고 판단된 사업들임.

2009년도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결과 위와 같은 유형의 사업들은 총 8,400여개 세부사업 중 1,350개(기금포함)임.

- 세부사업 담당 공무원이란 이 1,350개 사업 담당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임.

[표] 제도 도입기 적용가능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유형

사업유형	설명 및 세부사업 사례
인력양성 · 운영	-특정분야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 인력양성 및 인력운영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기초 의과학자 육성 지원, 산업기술인력양성,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지원, 국가대표선수 양성
서비스	-개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방과 후 학교 운영,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지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 암조기 검진, 노인 ·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국가예방접종실시,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노인일자리확충, 장기요양보험시범사업, 무료법률서비스 등
보상금 · 보조금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 보조금 ※ 고용유지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전직지원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융자	-정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분야 및 자치단체에 유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 농축산 경영자금 융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대학생 학자금 융자
교육 · 훈련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 민주시민교육, 장애아 교육 지원, 초등과학교육 활동 지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 지원, 방송고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수도권 대학 특성화,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평생학습 진흥 지원, 농어업경영컨설팅
정보제공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 서비스 ※ 주민서비스 포털 운영,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운영, 디지털 교과서 개발, 여행 정보센터 운영,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 민원콜센터 운영
행사개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 국내외 문화 및 예술 공연, 체육, 박람회, 전시회 등의 행사 ※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노인의 날 행사,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 장려
각종 이용시설 제공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공연장, 전시관, 국립공원 등 각종 시민 이용시설의 건립, 운영 ※ 도서관 자료 확충, 국립과천과학관 건립 지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나. 조사내용

항목	조사내용	조사대상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 여건 진단	-성 주류화 전략 및 성인지 정책 인지도	-공통
	-성인지 예산 제도 수용도 인지도 이해도 필요성	
	-대상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평가 젠더관련성 부처 내 주요 시책사업 여부(국정과제 등) 수혜자 규모 성별통계 구비정도 등 사업의 특성	-세부사업 담당 공무원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 방안	-대상사업 확대 방안 -대상사업 선정 방식: 상향식/하향식 -교육방법 및 여건 -추진체계 -활용방안 -성인지 예산 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 개선 방향	-일반 공무원
일반적 사항	-성평등 의식 -성별, 연령, 부처, 직급, 담당 업무, 재직기간 등	-공통

2. 전문가 패널 집중 라운드 테이블 회의

- 목적
 -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성인지 예산 제도 추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대상
 - 학계 전문가,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 내 전문가 패널 5-10인
- 내용
 - 성인지 예산 제도 추진 현황에 대한 총체적 분석 및 평가
 - 향후 추진방향 및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과제들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
 - 성 주류화 전략 및 성인지 예산 추진 기반에 대한 평가
 - 대상사업 확대 방안 및 작성 양식
 -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 방안
- 공무원 대상 의견 조사가 구체적인 제도추진 절차 및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문가 조사는 장기적 추진 방향과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3. 문헌연구

- 관련 분야 선행 연구들을 검토함. 특히 공무원 대상 질문지 조사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 개발에 활용함.

4. 전문가 자문회의

-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 과정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쟁점을 도출하고, 질문지 조사 항목 구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Ⅲ. 연구내용

-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 여건 진단
 - 성별, 직급별, 부처별 성 주류화 전략 및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인지도, 성인지 예산 제도 수용도(인지도, 이해도, 필요성) 진단
 - 1단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평가 의견 수렴
 - 2011년도 대상 사업 선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혜자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고, 수혜의 성별 편차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우선적 시행 가능성에 대한 자체평가 의견을 수렴함.
- 성인지 예산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 도출
 - 대상사업 확대, 선정방식, 분석 주체, 교육방법 및 여건, 추진체계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함.
 - 성별, 직급별, 부처별, 성평등 의식 수준, 성 주류화 전략에 대한 이해 등에 따른 의견의 차이 분석
-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 개선 방안
 - 성 주류화 전략 및 성인지 예산 추진 기반에 대한 평가, 대상사업 확대 방안,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제안함.

○ 향후 제도 운영 방안 제안

- 이상의 제도 시행 여건 진단,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제도 시행 과정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제안함.

IV. 연구추진 일정

추진내용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세부연구계획 및 연구방향 확정									
• 착수보고회									
• 질문지 작성 및 표본추출									
• 질문지 자문회의									
• 질문지 확정									
• 전문가 집중 토론회									
• 실사									
• 조사결과 분석									
• GB 포럼									
•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제출									

V. 보고서 예상 목차

I. 연구목적 및 배경

II. 연구방법

1. 질문지 조사
2. 전문가 집중 토론회
3. 전문가 자문회의

III.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 여건 진단

1. 성 주류화 및 성인지 정책 인지도
2. 성인지 예산 제도 수용도
3. 대상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평가

IV. 성인지 예산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

1. 대상사업 확대
2. 대상사업 선정
3. 교육방법 및 여건
4. 추진체계

V.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 개선 방안

1. 성 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정착 방안
2. 대상사업 확대 방안
3. 성별영향평가 제도와의 연계 방안

VI. 요약 및 정책 제언

VI. 연계사업: 성인지 예산 정책 포럼 운영

1. 사업배경 및 목적

- 2009년 성인지 예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이해의 폭이 넓지 않음. 성인지 예산 제도의 취지와 의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와 관심은 많지만,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체계적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 정책 포럼을 운영하여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국회, 학계 등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성인지 예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여성단체 활동가, 성인지 예산에 관심 있는 신진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성인지 예산』아카데미 운영
- 포럼, 토론회 개최
 - 연구 성과 및 주요 현안별 포럼, 토론회 개최

3. 『성인지 예산 아카데미』교육 내용

- 교육기간: 1박2일
- 교육목표: 성인지 예산 제도 참여 역량 강화 및 의제 발굴
- 교육인원: 1회당 30명
- 진행방식: 강의 및 토론
- 교육 프로그램 구성

[표] 「성인지 예산 아카데미」프로그램(안)

과정	과목명
국가재정과 성인지 예산	1.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서 성인지 예산
	2. 정부재정개혁의 흐름과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해	3. 성인지 예산의 개념 및 해외 동향
	4. 성인지 예산서란 무엇인가?
	5.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 현황
성인지적 예산 분석론	6. 성인지적 예산 분석 방법론
	7. 성인지적 예산 분석 사례 분석
	8. 경제학적 예산 분석 기법의 성인지적 활용 방법(BIA, 비용/편익분석, 후생분석(welfare analysis) 등)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방안	9. 시민사회 주도형 국가의 NGO 활동 사례: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10. 성인지 예산서 모니터링
	11. 국내 정책 영역별 젠더 이슈의 탐색
	12. 전체토론

※ 교육 수요 및 요구에 따라 교육 횟수와 프로그램 변경 가능

○ 1차 성인지 예산 아카데미: 4.28-29일(1박2일)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I. 연구배경 및 목적

- 2009년도는 법률에 근거한 성인지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임. 국가재정법³⁾에 따라 정부는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함. 정부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2008년도에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음. 시범사업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서 시안이 마련되었고, 대상사업 선정,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등 향후 성인지 예산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음.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이니만큼 향후의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임.
- 성인지 예산서가 일회적인 시도로 그치지 않고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예산"의 언어를 통해 가시화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작성 과정(대상사업 선정, 담당자 교육, 각 기관별 예산서 작성 및 컨설팅) 및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를 모니터링·평가하여 초기 시행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3)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1.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모니터링

- 대상사업 선정, 작성 지침 및 양식, 교육, 작성 및 컨설팅 등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전반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2.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평가

- 성인지 예산서 평가
 -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성인지 예산서의 구조와 체계를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과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함.
- 각 부처 총괄 및 사업별 작성 실태 분석 및 평가
 - 각 부처 재정총괄 담당자가 작성하는 부처의 성평등 목표, 재정운용 추이, 2010회계년도 재정운용 방향, 그리고 개별 사업 부서에서 작성하는 예산서 작성 항목별 사업설명서와 예산 분석 내용을 평가함.

3. 향후 개선방안 도출

- 예산서 작성 단계별 개선방안 도출
 -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별 공무원 의견을 모니터링 하여 향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함.
- 성인지 예산서 개선 방안 도출
 -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보완 방안을 제안함.

III. 연구방법

1. 2010회계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담당 공무원 의견 조사

가. 조사개요

항목	내용
조사목적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별 어려움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조사대상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대상사업 담당자 및 해당 부처 재정총괄 담당자 전원 (200-300명 내외)

	※ 조사대상자 규모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가변적임. 현재 기획재정부는 프로그램 예산 체계 하의 세부사업 중 300여개 사업(이 중 양성평등 정책 사업은 90여개 임)을 대상사업(안)으로 선정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고, 26개 부처가 포함될 예정임. 그러나 이는 최종 확정된 사업이 아니며,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임.
대상자 선정	-전수조사(각 부처별 담당자 명단 및 e-mail 확보)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 -e-mail 조사
조사기간	-9월 중순-10월초(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 ※ 성인지 예산서는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10월 2일에 국회에 제출되므로 성인지 예산서 최종본이 작성되는 시점을 빠르게 잡아야 9월 중순임.

나. 조사내용

예산서 작성 단계	항목	내용
대상사업 선정	적절성	-대상사업의 적절성 및 근거 -대상사업 선정 절차
예산서 작성 지침 및 양식	적절성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및 양식의 적절성
교육	효과성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의 효과성 -교육 만족도
예산서 작성	어려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및 양식에 따른 작성 과정의 어려움
컨설팅	평가	-컨설팅 과정 평가
기타	성인지 예산제도 수용도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필요성
	향후 개선방향	-성인지 예산 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 개선 방향
	성평등 의식	-성평등 의식
	인적 사항	-성별, 부처, 직급, 담당 업무, 재직기간 등..

2. 담당 공무원 패널식 포커스 그룹 조사 또는 심층 면접

- 조사대상
 -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담당 공무원을 5-10인 내외로 선정하여 위의 작성 과정별로 포커스 그룹 조사 또는 심층면접을 실시함.
- 조사기간
 - 예산서 작성 각 단계(대상사업 선정, 지침, 교육, 작성 및 컨설팅)별로 약 4-5회
- 조사내용
 - 각 단계별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및 심층 조사

3. 성인지 예산 T/F 회의록 및 컨설팅 내용 분석

-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시점에 개최되는 성인지 예산 T/F 회의의 회의록 분석
- 성인지 예산서 작성 컨설팅 내용 분석
- 성인지 예산 컨설팅단 운영

4. 전문가 자문회의

- 1차 결과 분석 후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IV. 기대효과

- 법에 근거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첫 해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에 보다 내실있는 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임.

V. 연구추진일정

추진내용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세부연구계획 및 연구방향 확정									
• 착수보고회									
• 질문지 개발									
• 질문지 작성 자문회의									
• 실사									
• 심층면접									
• 전문가 자문회의									
• GB 포럼									
• 최종보고서 제출									

VI. 보고서 예상 목차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배경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II.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작성 사업 개요
 - 1. 성인지 예산 제도 추진 경과
 - 2.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및 추진체계
 - 3. 2010년도 대상사업 현황
- III.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모니터링
 - 1. 대상사업 선정
 - 2.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 3. 담당자 교육
 - 4. 예산서 작성
 - 5. 컨설팅
- IV.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작성 현황 및 평가
 - 1.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개요 및 분석틀
 - 2. 부처별 성평등 목표와 재정운용 추이
 - 3. 양성평등 예산 사업
 - 4. 일반예산 성평등 분석 사업
- V. 향후 개선방안

Ⅶ. 연계사업: 성인지 예산 컨설팅단 운영

1. 사업배경 및 목적

- 성인지 예산 제도는 성 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 '예산은 성 중립적이지 않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예산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 제도로써 성인지 예산은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자신의 사업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사업에 내포한 성불평등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력의 향상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함.
- 공무원들은 성인지적 예산 분석 과정에서 성불평등 측면을 '발견'하거나 '깨달을' 수도 있으므로 공식화된 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직접 분석을 수행하는 것 역시 일종의 교육효과를 가지게 됨.
-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성인지력이 부족한 공무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이에 성인지 예산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담당 공무원의 예산서 작성 과정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자 함.

2. 사업기간 및 사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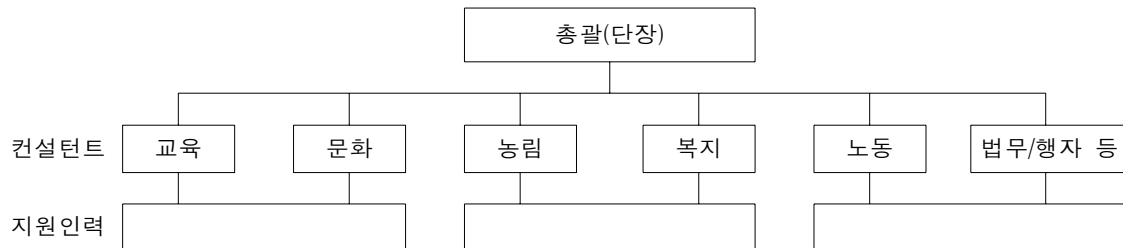
- 사업기간: 2009.4.-2009.9월
- 사업대상: 2010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담당자(각 부처 재정총괄담당 및 사업담당 200-300명)

3. 컨설팅 내용

담당		컨설팅 내용
재정총괄담당		-재정총괄 담당 작성 양식 성평등 목표 설정 방법 성평등 정책 성과 및 재정운용 추이 2010년도 개요
사업담당	양성평등예산	-지표별 작성 방법
	일반예산	-사업별 성불평등 이슈 제안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확보방법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

4. 컨설팅단의 구성 및 사업 추진 방법

○ 컨설팅단 조직(가안)



○ 대상사업 부처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직의 형태는 가변적이나,

- 컨설턴트는 부처별 담당제로 구성, 컨설턴트 2인당 지원인력 1인, 상시콜센터 담당자 1인
- 컨설턴트 1인당 20개 사업 관리
- 일반예산 중 대상사업이 200개 내외로 선정될 경우 컨설턴트 10명, 지원인력 5인, 상시 콜센터 담당자 1인 등 총 16인

※ 역할

- 컨설턴트는 담당 부처별 컨설팅 내용 및 방향 설정
- 지원인력은 컨설팅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정리

○ 사업추진 방법

- 부처별 연구진간 회의를 통한 컨설팅 내용 및 방법 브레인스토밍
- 관련 통계자료 구축
- 컨설팅 및 보고서 작성(보고서 작성 양식 개발)

5. 컨설팅 사업추진 일정

추진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대상사업 확정/통보							
-담당별 부처 및 사업배분							
-세부사업 설명자료 확보 및 세부내용 숙지							
-분석방법논의(브레인스토밍)							
-자료구축(통계 등)							
-컨설팅							

해외의 성인지 예산: 시민사회 주도 3개국 심층연구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가재정법(제16, 26, 57조)과 시행령(제9조, 26조)에 따라 2009년부터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이해와 활동의 폭이 넓지 않음. 정부 주도하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취지와 인식이 아직은 그 대중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정부 부처 및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직접 작성하는 공무원들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전반적 이해와 참여의식 수준 또한 만족할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방안과 다각도의 정책 결정 과정 개입방식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모델과 구체적 방안이 부족한 상태임.
-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시민사회 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정부 주도하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약점을 보완하며 형식적 기능의 성평등 평가 도구로 쓰임을 사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의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해력을 높이며,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론적 틀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외의 시민사회 주도형 국가들의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맞도록 개발, 제안 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이론적 틀: 효과적 성인지적 예산 제도의 조직화를 위한 대안적 협의체 마련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모델제시를 위한 국내외 사례와 문헌 수집 및 분석
 - 외국 문헌 분석: 시민사회 주도형 국가들 중 활발한 시민단체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와 독립적 연구기관 등을 선정하여 이들이 제공하는 안내책자, 정기/부정기적 연구보고서, 워크숍 자료, 등의 발간물 중심으로 분석

- 한국 시민단체 활동 분석: 시민사회 성인지 예산운동과 관련된 시민단체 중심으로 안 내책자, 활동 보고서, 워크숍자료 및 기타 관련 문헌 수집, 분석
- 기타 국제기구 보고서, 국제적 회의 및 미디어 보도자료 등을 수집, 분석

3. 주요 연구내용

- 이론적 도구로 제시하게 될 성인지 예산 활동 조직화 방식을 위한 대안적인 협의체인 거 버넌스 개념 도출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 참여 방안 모델 분석
- 시민사회가 해외 성인지 예산 활동의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사례 중 3개국을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성인지 예산 활동 주축이 된 시민단체들의 유형, 특성, 기능, 역할, 전략 등을 집중 분석하며, 이들 단체의 예산 정책결정 과정 참여 방법에 대한 서로 다른 다양한 접근 방법 분석
- 국내 시민사회의 성인지 예산활동의 발달과정, 전개방식, 특징과 역할 등을 분석
 - 한국여성 민우회 예산분석네트워크
 - 성인지 예산 전국 네트워크
 - 기타 관련 시민 단체와 지원적 연대 연구기관(연구자) 등의 활동 조사 분석
- 시민사회 참여 방안으로는
 - 해외의 성인지 사례분석과 한국의 성인지 예산 활동의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국 시민사회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 협의체 모델 제시 및 개발
 - 한국 시민단체의 자체적인 향후 활동 방안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Collective Action)

집단적 행동을 통한 성인지 예산의 의식화와 의제 개발



(Partnership & Cooperation)

공통의 목표 공유하는 NGO, 연구가집단, 기관 등과의 연합 및 연대



(Lobbying & Social Discussion)

정부/국회와의 접촉을 통한 정치적 로비활동 및 방송매체를 이용한 사회, 문화적 로비 활동 병행으로 여론형성 및 사회 담론화 형성

- 시민 단체의 대안 예산서/평가서 작성 지침서 개발

4. 기대 효과

- 시민사회 역할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한 성공적 성인지 예산 제도 정착화 기여
-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맞는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개발
- 시민사회의 성인지 예산활동에 이론적 근거와 구체적 운동 방향 제시 기여
-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방안 및 타 단체와의 연대 방안 제시를 통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대

5. 연구주진일정

추진내용	추진 일정 (월 별)							
	3	4	5	6	7	8	9	10
-세부연구계획 및 연구방향 확정								
-착수 보고회								
-문헌 자료 수집 및 분석								
-GB포럼 준비 (성인지 예산 아카데미 교육용 교재 개발)								
-보고서 초안 작성								
-GB 포럼 (성인지 예산 아카데미 및 토론회)								
-최종 보고서 작성								
-최종 보고서 제출								

6. 보고서 예상 목차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배경
 - 2. 연구방법
 - 3. 연구내용
- II. 성인지 예산 활동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협의체 (거버넌스) 모델
 - 1. 이론적 배경: 거버넌스 개념
 - 2. 성인지 예산의 거버넌스
- III. 해외의 성인지 예산 사례: 시민사회 주도형 국가
 - 1. 영국
 - 2. 캐나다
 - 3. 남아프리카 공화국
- IV. 한국의 시민 단체 성인지 예산 활동
 - 1. 발전과정과 활동내용
 - 2. 성과와 한계점
 - 3. 향후발전 방향과 과제
- V. 시민사회 참여 방안
 - 1. 대안적 정부-국회-시민사회 협의체의 (정부-국회-전문가-시민사회 거버넌스) 형성과 실현 방안
 - 가. 시민단체 역할
 - 나. 국회/정당/국회의원 역할
 - 다. 정부 역할
 - 라. 전문가 집단/개인 역할
 - 2. 시민 단체의 예산분석 운동 방향
 - 가. 일시적 또는 한시적 성인지 예산 활동 단체 구성
 - 나. 성인지 예산의 의식화와 의제 개발
 - 다. 타 NGO, 전문 연구 집단, 정당/국회와의 연합 및 연대
 - 라. 정치, 사회, 문화적 로비활동 및 사회 담론화 과정
 - 마. 개인별/지역별/단체별 대안적 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서 작성
- VI. 요약 및 시사점
 - 1. 요약
 - 2. 시사점
 - 가. 한국사회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 사회의 역할
 - 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시민단체의 전략적 대응

참고문헌

부록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I. 연구배경 및 목적

- 성인지 예산의 전제는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이 의도하지 않게 기존의 성불평등 구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성인지적 예산 분석은 이를 가시화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임.
- 또한 현재 성인지 예산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성인지 예산 제도의 지평이 확대되어야 하고 예산서의 예산분석이 보다 심화되기 위해서도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사업에 암묵적으로 내포된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
- 한편 성인지 예산 활동이 법이라는 강력한 수단에 근거하여 제도로서 시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제도적 여건은 좋은 편임. 그러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의 뿐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합의의 폭은 매우 좁은 것이 현실임.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여성을 위한" 예산과 동일시되는 것이며, 이러한 왜곡된 이해에서 출발한 반발과 저항이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맥락에 맞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적절한 개념화, 토착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마경희 외, 2008).
- 이에 본고는 첫째,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의 설계, 집행, 결산의 과정에서 성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 사례분석을 통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세입분석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 분야의 성인지적 예산 분석을 통하여 예산분석 방법론을 확대·심화하며, 셋째, 다양한 사례발굴을 통해 성인지 예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이해를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감대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출발하고자 함.

II. 연구내용과 방법

○ 성인지 예산분석 방법론 검토

- 성인지 예산분석의 범위
- 성인지 예산분석의 원칙과 방법들
- 국내외 예산분석 사례

○ 성인지 예산분석 사례

- 대상사업의 선정: 성평등 정책과 일반정책으로 양분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분야와 부문의 정책을 검토하여 정책 영역을 선정함. 각 정책영역에서는 국정과제등 정책사업의 위상과 예산규모, 다부처 사업, 젠더관련성,⁴⁾ 가용통계의 축적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

○ 분석방법:

- 성평등 정책 예산분석에서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동 예산의 적절성 및 사회적 편익 추정함. 일반정책 예산분석에서는 수요자 만족도 조사, 수혜자 귀착분석 등 실시. 각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 ① 해당 분야 정책에서의 젠더 이슈 도출을 위한 이론적 논의 검토
 - ② 예산 및 수혜자 통계자료 분석(보고통계, 조사통계)
- 모든 정책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한 분석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상에 맞춰
 - ① 정책 대상자의 정책 수요 및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혜의 성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정책 수혜자 대상 질문지 조사
 - 질적 조사(인터뷰, 포커스 그룹)
 - ② 수혜귀착분석(benefit incidence analysis)
 - ③ 수요분석(demand analysis) 등을 실시함.

4) 젠더 관련성(성불평등 문제와의 관련성)

- 통계적 불균형이 알려져 있고 현저하게 나타나는 사업
- 분석결과 예산의 의도하지 않은 성불평등 효과의 측면에서 성인지적 예산분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사업

예산구분	분야	분석 대상사업	비고	주요 분석방법
성평등 정책 예산	복지	성매매 방지법	국정과제	비용/편익 분석
	복지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국정과제	비용/편익 분석
	안전	공공질서 및 안전	다부처사업	수요자 만족도 조사
일반 정책 예산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다부처사업	수혜자 귀착분석,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다부처사업	
		미래전략산업육성	다부처사업	
	교육	국가장학사업		수혜자 귀착분석
		BK21사업		수혜자 귀착분석
		학부모 도우미 운영		설문조사
	교통	교통정책(수송 및 교통)		설문조사 등
	보건	보건의료서비스		수혜자 귀착분석
	복지			

○ 성인지 예산분석을 위한 의제 개발

- 의제개발 영역 선정: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분야와 부문의 정책을 검토
- 영역별 성인지 예산분석 대상사업 선정: 영역별 관련연구물로부터 의제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정리하여 이슈페이퍼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 난상토론을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함
- 대상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뿐 아니라 수혜자가 인적 특성에 따라 구분될 수 없는 비경합적(non-rival), 비배제적(non-exclusive) 성격의 정책도 포함(예: 가로등, 국방, 안전 등). 후자의 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과 분석방향을 모색함.
- 개발된 의제의 성인지 예산 분석의 방향 제시

분야	성인지예산분석 대상사업	예산분석 방향
환경보호(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보건(식품의약품안전)		
공공질서 및 안전(해경, 재난방재·민방위)		
국방, 통일, 외교, 보훈		
수송 및 교통(도로, 철도,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통신(정보통신, 우정)		
국토 및 지역개발(수자원)		
과학기술(R&D)		

Ⅲ. 연구추진 방식

- 대상사업별 해당 전문가가 분석을 주도함
- 총괄지원팀이 연구진 워크숍을 개최하여 ①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②주제선정의 적절성 및 연구방법에 대한 상호토론 ③연구계획서의 구체화를 지원
- 또한 총괄지원팀이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업무를 지원하고,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질과 연구간 통합성을 제고함

IV. 기대효과

-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분석을 통해 경제적 자원이 성별에 따라 배분되는 방식을 가시화하고, 효율적이며 성평등한 배분을 위한 대안적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음.
-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 예산 재배분 요구의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
-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제고.

V. 연구추진일정

[illegible]

Ⅵ. 보고서 예상 목차

I. 서론

II. 성인지 예산분석 방법론

1. 성인지 예산분석의 범위
2. 성인지 예산분석의 원칙과 방법들
3. 국내외 예산분석 사례

III. 성인지 예산분석 사례

1. 사례 선정과 개요
2. 성평등 정책 예산분석 사례
3. 일반정책 예산분석 사례

IV. 성인지 예산분석을 위한 의제 개발

1. 의제개발 개요
2. 영역별 성인지 예산분석 대상사업

V. 성인지 예산분석의 함의와 과제